

정부·지자체 위원회만 6000개... 규제 정비로 5000억 절감

(연간)

중기부·중소·중견·중소벤처기업부
현장선 규제·부담 목소리 높아
심의 대상 현실화 등 3대 전략

구분	주요 내용	비용경감
1 심의대상 현실화 (15건, 438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심의 통합, 간소화 위원회 심의면제대상 적극 확대 	3,865억원
2 기준·절차 합리화 (19건, 830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 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 완화 	399억원
3 형태·제도 개선 (12건, 554개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형태 개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 조성 	1,031억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6000여개의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의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해 연간 5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규제 이행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위원회의 규제애로 1800여건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가나 지자체는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현장에선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그동안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현황을 분석·진단했다. 진단 결과 규제애로 개선 과제수만 총 18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지자체와 함께 만든 이번 개선 방안에는 기업 부담 경감 및 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 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합리화(19건) ▲형태·제도개선(12건) 등 3대 전략과 46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은 연간 약 5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엔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 대상을 현실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3865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아울러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 기반도 조성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액은 1031억원이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 애로를 일괄 정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 활동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규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248만 소상공인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곳 포함
내일부터는 훌쩍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다. 2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가 약 245만개사,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약 3만개사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가 지급대상이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

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만8406개사도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엔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포함됐다.

첫 날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하루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을 입금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

분은 이튿날 오전 3시에 이체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인터넷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 없이 간편하게 끝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후보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한다.

/김승호 기자

독자 기술 '스마트케어 에어매트리스' 첫 선

코웨이, 에어셀 시장으로 재편 포부

코웨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2 CES'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 혁신 제품과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선보였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CES에선 'We innovate for your better life'라는 컨셉으로 스마트 슬립솔루션 존, 노블 존, 에어메가 존, 테크 존, 아이콘 존 등 총 5개 존을 꾸렸다.

특히 '스마트케어 에어매트리스'를 처음으로 내놨다. 스마트케어 에어매트리스를 통해 기존 스프링 매트리스 시장을 혁신적인 에어셀 시장으로 재편하고 시장 판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은 1분기 중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



코웨이 스마트케어 에어매트리스.

다. 코웨이만의 독자특허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케어 에어매트리스는 사용자의 체형과 수면 자세 등에 따라 매트리스 안에 있는 에어셀이 공기압 변화를 감지해 본인에게 맞는 경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김승호 기자

강렬한 존재감... 시몬스 '플리네' 공개

벨벳 소재·플리츠 주름 적용

시몬스가 벨벳 소재와 플리츠 주름 디테일이 강렬한 존재감을 이루는 프레임 신제품 '플리네(Fleane)'를 내놨다.

6일 시몬스에 따르면 플리네(Fleane)는 유려피안 쿠트르 무드를 더해 침실 공간에 우아함과 고전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특히 침대 프레임에서는 보기 드문 섬세한 터치감의 벨벳 소재를 프레임 전체에 과감히 사용했다.

헤드보드 전체를 풍성하게 감싼 플리츠 주름 디테일이 프레임 하단까지 연

결돼 침대 프레임 전체가 하나의 마스터피스를 이룬다. 헤드보드 가장자리를 섬세하게 둘러싼 프릴 디테일은 로맨틱한 느낌까지 자아낸다.

플리네는 자연적인 여유로움을 더하는 차분한 그린 컬러와 세련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한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출시됐으며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시몬스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시몬스 침대 고나현 디자인 디렉터는 "우드 소재에 국한된 클래식 디자인이 아닌 패브릭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에서 클래식 무드를 풀어낸 침대 프레임"이



시몬스 침대, 2022 SS 신제품 프레임 '플리네(Fleane)'.

라며 "커튼 등에 사용되는 벨벳 소재의 플리츠 주름이 움직임에 따른 자연스러운 무빙감과 함께 빛의 각도에 따른 은은한 반사 효과로 보다 우아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중기중앙회·경총 공동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 3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매뉴얼은 법 의무사항을 보기 쉬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됐다. 실제 현장사례(5건)와 20여 종의 필요 문서양식까지 모두 담았다.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 신규확진 4126명... 위중증 24일 만에 800명대로 /사진 뉴시스
▲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1968만명... 전체 38.3%

▲ 평택 공사장 화재 진화 중 실종 소방관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
▲ '소방관 참변' 공사장 1년 전에도 작업자 3명 추락사



▲ CJ대한통운, 국토부에 택배업계 '사회적합의 이행' 실사 요청 /사진 뉴시스
▲ '이재명 손해 소송' 김부선,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 신청